

發表 및 討論要旨

第 1 會議

司會：李洪九

發表：李光麟，全海宗，北岡伸一

討論：徐大庸，李炳柱，崔相龍

〈發 表〉

李光麟：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수용에 관한 가설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서 한국의 전통가치속에 민주주의적 요소가 어느 정도 있는나를 살폈다. 한국사회를 지배하였던 유교 속에는 민본, 예양, 겸양 등과 같은 말이 있어서 주권자가 인민임을 밝히고 있고, 또 겸양, 예양은 평등사상과 관용정신을 내포하고 있어서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속에도 민주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상 자체에 對한 이야기이고 실천적인 면을 살펴보면 유교는 주종관계 혹은 계급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서양에서 횡적관계가 강조되는 것과는 달리 종적관계가 중요시됨으로써 실천적인 면에서는 반민주적인 행위가치가 지배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전통가치 속에는 민주적인 요소가 희박하였으며 한국의 민주주의적 가치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입시기에 관하여는 1876年 개항 이후부터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정변, 농민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인권보장, 평등보장 등을 주장해 왔으며 1894年 동학난 때에도 그와 비슷한 주장들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에는 신분상의 모든 차별을 폐지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

다. 그러나 인권존중, 평등보장 등의 주장은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관계로 널리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아래로부터 일어난 조직적인 민주주의운동이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것은 1896~98年 사이의 독립협회 운동일 것이다. 독립협회 운동은 1886年에서부터 1895年 말까지 10년간 서재필에 의하여 주도된 운동으로서 서재필은 미국에서 직접 민주주의교육을 받은 관계로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민주주의를 몸에 익힌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에서 정식으로 3년간 교육받았는데, 그 당시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에서 가장 널리 읽힌 책은 18세기 계몽주의사상에 관한 서적들이었다. 서재필도 이러한 류의 서적들을 깊이 탐독하였기에 천부인권 사상을 철저히 몸에 지니고 있었다. 또한 서재필은 법치주의도 철저히 신봉하였다. 당시 한국에서의 법은 상당한 부분 신분관계에 의하여 제약받고 있었으며 법의 집행도 관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상황이었던 바, 서재필은 그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법치주의를 강조한 것이었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발행하는 등, 다각적인 운동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서서히 파급시켰다. 이에 위협을 느낀 황제는 「皇國協會」라는 보수단체를 조직하여 독립협회에 대항하게 함으로써 독립협회는 결국 1898年 12月 25日 만들어진지 2년반 뒤에 해산당하였다. 이로써 모처럼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싹트고 뿌리를 내리려 하는 때에 민주주의운동이 중단되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독립협회가 해산을 당할 무렵, 한국에는 사회 진화론이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사회 진화론은 중국인 梁啓超가 잡지에 기고한 글과 그의 문집인 「飲水室文集」 등을 통하여 들어왔다. 梁啓超는 루소의 「民約論」의 내용을 받아들였지만 특히 社會進化論을 많이 받아들였다. 그는 社會進化論을, 선배사상가 嚴復이 英國의 철학자 헉슬리의 저서를 번역하여 간행한 「天演論」이라는 책을 통하여 흡수하였다. 社會進化論중에서 특히 생존 경쟁, 적자생존의 사상이 중심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바, 이러한 사상은

19C 말에서 20C 초에 걸쳐서 한국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大韓每日申報」라든가 「皇城新聞」에서는 이러한 사회진화론의 중심사상을 많이 강조하였던 것이다. 당시 한국사회에는 일제가 침투해 들어오면서 가까운 시일내에 大韓帝國도 멸망하고 한민족도 멸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민족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하는 保種問題가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적자생존, 약육강식 등의 사상이 한국사회에 영향을 준 것이었다. 사회진화론이 영향을 미치면서 서재필에 의하여 주도된 독립협회의 민주주의 운동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국가를 중시하는 국가 우선주의가 전면에 대두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시대사조에 영향받아 개화기인 구한말 특히 1910년 합방전까지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힘들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전통가치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요소가 적었고, 또 사회진화론의 파급에 따라 대두된 국가우선주의 때문에 한국에서는 대한제국 말까지 민주주의의 요소가 희박했었던 관계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全海宗: 본 논문의 제 1절에서는 중국 청말시대에 민주주의를 도입한 인물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나를 살펴보았다.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수용은 처음에 민주주의 사상의 本據인 歐美등의 西洋人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서양인들 중에서는 선교사를 비롯하여 외교관·언론인·학자 또는 상인도 있었다. 그들중에서 William A. P. Martin 이 가장 두드러진 人物이었다. 중국인의 경우를 보면, 유학생이나 외교관도 후기에는 민주주의 사상의 도입과 관련이 있으나, 초기에는 주로 京師同文館이나 上海方言館, 江南製造局의 翻譯館 그밖에 洋務運動과 관련된 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외국인 교사의 교육을 받고, 또 상기한 기관에서 번역하거나 著述한 서적을 통하여 민주주의 사상을 수용하였다.

제 2절에서는 주로 民本主義와 관련하여 동양의 전통적인 전제주의가 어떻게 비판받았는가 하는 것을 清末의 언론저술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문에서 예시한 인용문을 종합하여 보건대, 專制主義에 대한 비판에는 민주적 정치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 비판은 전제주의 자체를 비난한 것일 뿐 민주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어떤 체계적인 논리적 전개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단순한 전제주의 비판은 서구사상의 도입 이전에도 자주 있었던 것이다. 한편, 민본주의의 견지에서 民을 중시하고 君을 경시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 전제주의를 비판한 인물들 중에는 康有爲·梁啓超와 같은 變法論者들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전제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도 후에 보수·반동화하였다는 사실도 흥미롭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가지 피력한다면, 民主主義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李光麟教授는 민본주의를 민주주의의 하나의 요소 또는 경향으로 보았는데 민본주의를 하나의 경향으로 강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제 3 절에서는 단순한 전제주의비판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란 개념의 가장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미, 말하자면 자유, 평등, 내지 민주, 민권에 관한 청말 지식인들의 언론을 소개하였다. 본문에서 예시한 인용문을 살펴보면, 전제주의에 대한 비판이 격렬해지고 민주주의 사상의 근본인 자유, 평등이 강조됨에 따라서 청말 지식인들은 국가나 군주 또는 정권, 정치제도에 대한 종래의 관념에 대하여 反省·批判하고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려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사상적 또는 이념적 경향이 실천적인 민주주의운동으로 표면화되는 데에는 대체로 두가지 방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두가지 방향이란 곧 원만한 변화에 대한 주장과 급격한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다.

제 4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민주주의의 정치적 제도나 기구에 관한 清末 지식인들의 논의를 정리하였는데 시간관계상 구체적 내용 설명은 대체적으로 생략하고 특이한 사항 두 가지만을 언급하겠다. 하나는 지식인들이 고대 중국의 가공적 정치기구인 周禮를 하나의 지침으로 고려했다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投票에 관한 嚴復의 말로써, 嚴復은 “英語로 福脫(Vote)라고 하는데 적당한 譯語가 없어서 暫定的으로 占字라고 한다” 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清末의 지식인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정치상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상당히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들이 언론이나 학회를 통하여 그 이념을 국민에게 고취하려고 하거나 실천에 옮기려고 한 것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清末의 모든 지식인이 이에 동조한 것은 물론 아니다. 서양의 사상이나 西學 내지는 기술이라 하여도 전면적으로 거부한 지식인이 많았다는 것은 五四運動期에도 잘 나타난 일인데, 더욱 2千年來의 中國의 정치체도를 개혁하려고 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대하여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중국의 민주주의 수용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견해를 밝혀둌으로써 발표를 마친다.

北岡伸一: 본인은 논문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나 사상에 관한 문제보다는 정치적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고찰해 보았다. 또한 구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일본에 급속도로 보급된 원인과 경로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함께 1930년대에 민주주의가 불완전한 상황에 빠지게 된 원인과 경과에 관하여도 아울러 검토해 보았다.

비록, 이번 회의의 주제가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치문화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본인은 민주화 내지는 민주화과정에 관한 문제가 단순히 정치문화적 변수만 고려함으로써는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치문화의 중요성을 명확히 논하기 위해서는 민주화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유형의 정치문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의 민주화 과정을 고찰함에 있어서 본인은 두가지 영역에 초점을 두었다. 하나는 제한적 참여에서부터 개방적 참여 정도로까지 구분되

는 정치적 참여의 정도로서, 이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다른 하나는 민주정치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되는 정치적 반대의 합법적 제도화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반대는 하나의 반역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사회와 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반대파의 의사를 수용하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제도화는 민주주의의 이해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이상 두가지 관점을 토대로 막부말기부터 1930년대까지의 기간을 5단계로 나누어 일본에서의 민주주의 수용을 개관해 보았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제 2절에서는 막부말기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적하였다. 막부시대에는 정치참여가 무척 한정되어 있었으나 말기에 이르러서 서구의 충격에 의한 국가적 위기가 고조되어 감에 따라 정치참여가 증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반대의 제도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제 3절에서는 1870년대부터 1880년대 사이의 기간동안에 일본의 민주화를 이끌기 시작하는 지배계층의 형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당시 지배계층들은 국가의 운명이 곧 자신의 운명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토대로 민주주의를 수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제 4절에서는 1890년대의 정부와 정당간의 관계변화를 검토해 보았다. 1890년대의 정당은 새로운 지위를 획득해가기 시작하였고 점차 정부에 대하여 합법적인 반대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제 5절은 1900년대 초기에서부터 1910년대까지의 기간을 다루었고 제 6절에서는 1920년대를 다루었다. 전자는 일본에서 민주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시기였고, 후자는 민주화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이 두 시기는 공통적으로 양극적인 정치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의 기간동안에 정치구조 내에서 양극을 구성하는 세력 즉, 관료에 의해 대표되는 세력과 정당세력간에는 상이한 권력기반을 지니고 있었던 반면, 1920년대에 정치구조 내에서 양극을 구성하는 세력들은 동일한 권

력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일본의 민주화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을 다음 네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평등화의 추구이다. 막부말기 이래 평등화라는 가치는 하나의 중요한 슬로건이 되었고 하급계층의 정치참여 확대는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다. 이러한 평등적 사고는 일본의 민주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정치사에 있어서 군사적 선택이 강했던 1930년대에도 중시되었던 것이다.

둘째는 일본 국민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세계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중시적 경향은 일본으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수용케 하였으며 결국 명치헌법을 탄생시킨 것이다. 당시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더 나은 국가전설을 위하여 민주주의 이념을 주저없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세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경향은 정치적 세력간의 경쟁이다. 일본의 정치문화에서 비롯된 정치적 경쟁은 정치의 근본을 붕괴시킬 위험성도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네번째 경향은 정치 세력간의 결탁이다. 일반적으로 권력쟁취를 위해 이루어진 결탁은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초기 이러한 결탁적 경향은 일본의 민주주의의 수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나 1930년대에는 일본정치의 부정적 요소가 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일본 정치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경향들은 일본의 전통적 정치문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본의 민주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정치문화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친다.

〈討 論〉

徐大鼐: 本人은 李光麟 교수님의 논문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다른 발표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다른 두 토론자들에게 맡기도록 하겠다.

작년에 ‘아세아에서의 공산주의 수용’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한국에서의 공산주의는 실천적으로 수용된 반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학자들과 지식층들의 학문적 연구를 토대로 수용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도 서재필 등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난 뒤 한국에 전파시킨 것이므로 실천적으로 수용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학문적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가 수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삼국간의 민주주의 수용에는 다소간에 차이가 있다.

李光麟 교수님의 논문에서 특별히 비판할 점은 없다. 다만,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기존연구들이 행한, 과거 우리나라 역사상에 나타난 특정의 제도와 민주주의간의 연계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자의성이 게재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민주주의 사상은 서구적인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수용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의 현실에 부합되도록 적용시켰는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李光麟 교수님은 1884년 갑신정변의 정강이라든가 김옥균의 상소문, 전봉준의 정강 12개 요구조건, 갑오개혁시 군국기무처의 개혁안 등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 나라에 민주주의가 들어온 것을 요약하여 밝히셨고 서재필의 국민계몽 및 교육개혁 등을 언급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 점은 예나 지금이나 민주주의 구현에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즉, 교육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민주적인 요소가 배제된다는 것은 정론이고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리고 李光麟 교수님이 발표중에 말씀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본문 P. 32의 앞부분, “政府側에서는 法的 制裁形式을~皇帝가 讓步하였던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서구

특히 영국에서 민주주의가 왕권을 축소시키고 민권을 신장시키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왕권이 민권에 의하여 제한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국가주의의 대두와 민주주의의 쇠퇴를 논하셨는데 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권신장을 밑거름으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민주주의의 출발이 서구의 경우와는 상이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가진다. 즉, 국가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개인의 인권신장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데 반대로 국가주의를 위해 개인의 인권이 제한받은 것이 아닌가 싶다. 결국, 국가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발전이 제한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李炳柱: 우선 훌륭한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케 해 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며, 동양에서의 민주주의 수용이라는 문제를 놓고 국제회의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동양 각국에서의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경로와 방식간에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는 관제로 全海宗 교수님의 논문에 관하여 주로 이야기 하겠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 대해서도 몇가지 질문을 하겠다.

全海宗 교수님은 본 논문을 통하여 민주주의 요소에 대한 의미규명과 각 요소에 관한 중국지식인들의 이해 및 민주주의 제도수용문제까지 다루어 주셨으며, 더우기 도입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다. 또한 논문에서 참고가 된 문헌들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원본들이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몇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서양으로부터 민주주의가 도입되었다는 것은 누구에 의하여 도입되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교수님은 초기 중국에서는 서양인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전파되기 시작하다가 점차 중국인에 의하여 보급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시대를 좀더 올려서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예를 들면 1830년대 말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선교외에도 서양의 사상을 전파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그들의 활동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도입시기를 좀더 올려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嚴復 등과 같은 중국 지식인들은 민주주의 가치를 언급함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많은 부분에서 유교적 가치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면서 민주주의를 소개하였는데 이는 서구사상에 대한 전통 지식인들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는 과연 중국지식인들이 어떠한 입장에서 서구사상을 받아들이고 전파했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접점은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토착화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민주주의의 정착이 실패하여 공산주의로 넘어갔는데 이러한 사태변화의 조짐은 이미 청말부터 배태된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서구에서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권보장이 발전되어 성숙된 것인 반면 중국에서는 개인적 인권중시 보다는 부국강병적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이해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 평등 등의 민주주의 개념은 경시되었고 국가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 우선시되었던 것이다. 결국,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수용은 초기부터 어려웠던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청말 민주주의를 수용한 학자들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는데 반대로 민주주의 수용을 거부한 학자들에 대한 논의도 첨가되었으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중국에서 민주주의가 도입된 시기를 어디까지로 잡아야 하는 도입시기에 관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청말 뿐만 아니라 5·4 운동시기도 민주주의 수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는데 본 회의에서 5·4 운동기에 관한 논의가 제외되어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이번에는 李光麟교수님의 논문에 대하여 질문하겠다. 개항 이후에 민주

주의를 받아들이려 노력하였던 개화세력들은 실학 및 천주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천주교가 민주주의 수용의 토양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는지,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를 묻고 싶다. 또, 국가주의를 말씀하셨는데 국가주의가 부국강병이라는 말과 대치될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

崔相龍 : 본 회의에 참석한 일본학자들, 특히 발표하신 北岡伸一 교수는 일본정치사 분야에서 일인자에 가까운 학자여서 본인이 논문을 비판하기는 어려우나, 몇 가지 점을 지적하겠다.

첫째, 지금까지 명치이후의 일본 근대사에 관한 연구가 주로 Marxism과 관련된 것인데 이러한 Marxism 시각에 반대하는 일련의 학자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신보수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일본학자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라 생각되며 한국 학자들은 이를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발표자는 서양민주주의 사상이 일본에 들어온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사상적 접근방법과 정치사적 접근 방법중 후자를 택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선택이 논리적으로는 좋으나 과연 사상면과 제도면을 따르는하여 얼마만큼이나 소득이 있을지 의문이다. 즉, 사상과 제도를 따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접근방법의 유효성을 묻고 싶다.

셋째, 발표자는 정치참여 확대의 정도와 정치적 반대의 제도화, 이상 두가지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너무 단선적인 것 같으며, 주로 정치적 엘리트 중심의 연구라는 인상을 가지게 된다. 또한, Nationalism, 부국강병, 서양화라는 문맥으로 다루었는데, 이러한 과정속에서 지불된 손실에 대하여는 논의가 없다. 정치사에 있어서 대중측면의 손실이 굉장한 것이었는데도 이러한 측면에 對한 설명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네째, 발표자의 논리에 따르면, 1930년까지는 민주화가 잘 이루어졌다가 1931년부터는 엉망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러한 정치적 비약에 대한 설

명이 부족하다. 내가 알기로는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한 원인 규명에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다. 하나의 명치헌법 자체에 원인이 내재되어 있다는 견해로서 초기부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발효자의 견해처럼, 명치헌법의 출발은 좋았으나 지도자의 실책에 원인이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 시각은 일본의 군국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인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과연 지도자의 실책을 원인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다섯째, 본 논문의 마지막에 일본의 평등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본에서는 평등화가 자유화를 저해했다”는 명제를 제시하였는데, 과연 일본 역사를 볼 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엘리트중심시각으로 본다면 평등에 대한 시각이 회피해진다고 생각한다. 결국, 일본사에 있어서 평등과 자유를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근대사 연구에 있어서 Marxism적 시각이나 비 Marxism적 시각, 양자에게는 ‘日本一國主義’라는 공통적인 결점이 있다. 즉, 너무 일본 국내중심으로 본다는 것이다. 국제적 관련성도 중요한 것인데 과연 국내정치로만 일본민주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최근 Marxism측에서는 이에 대한 반성으로 동아시아 특히 중국 중심으로 분석하는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한국 문제를 완전히 배제한 전제하에서는 일본 근대사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答 辯〉

李光麟 : 본인의 논문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의 가설이어서 수정해야 할 소지가 많은 데도 徐교수님이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다.

李炳柱 교수님이 제시하신, 민주주의 수용시기를 좀더 올려잡아야 한다는 문제는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시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국의 경우에는 모르겠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선교사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그들에 의한 서구사상의 소개가 많지는 않았다. 한국에서는 1882년 5월 한·미 수호통상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한국측에서는 조약조문에 기독교 문제를 첨가시키려고 고심하였다. 그러한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더라도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수용시기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민본주의와 관련하여 개화파와 실학, 또 천주교와의 관계 및 영향을 물어보셨는데 천주교는 한국에서 상당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일반 지식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토양을 마련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실학이 신분해방 등에 도움이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천주교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마지막으로 두 토론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국가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하자면, 개인적으로는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을 부국강병과 연관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가주의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았음을 시인한다.

全海宗: 李炳柱 교수님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하여 대체로 동감한다. 미비한 점은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였던 까닭이다.

우선, 동양삼국의 민주주의 수용조건이 다르다는 때에는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수용시기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선교사들의 활동이 있었지만 당시 사회적 환경의 이유로 매우 소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하지 않는가 싶으며 그렇게 적용하였다. 또한 시기적으로 지식인들에 대한 개별적 연구를 통해 시기문제를 좀더 명확히 해야하나 이에선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1860년대 이전의 시기는 일단 접어둔 것이고 같은 논리로 삼민주의 대두기부터 5·4 운동기까지의 논의도 제외시켰던 것이다.

끝으로 민주주의 수용을 거부하는 지식인들의 소개도 있어야 한다고 하

셨는데, 당시의 지식인들은 조직적인 언론을 통한 공통된 이론을 전개시킨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개인적 사고를 토로한 것이어서 양자의 논쟁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사례연구를 선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北岡伸一: 崔相龍교수님은 모두 여섯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 모든 것이 본 논문의 부족한 점을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한다. 본인은 질문과 지적하신 평가가 상호 연관적인 것들이어서 종합적으로 답변하겠다.

우선, 말씀드릴 점은 본 논문이 일본의 근대화문제나 조직화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정치적 안정과 민주화과정에 대한 객관적 정리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기에 시각의 단순화를 기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님이 Marxism과 비 Marxism 시각간의 차이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본인은 양자의 시각을 떠나 日本의 국가적 민주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시각의 단순화를 기했다. 또한 사상적 접근방법과 제도적 접근방법, 양자를 구별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구별하여 말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양자는 상호 관련되어 있어 구별할 수 없으며 본인이 후자의 접근방법에 치중하여 논리를 전개시켰다면 이는 방법적 선택에 불과한 것이다.

끝으로, 최교수님이 지적하신 문제점 중에서 엘리트중심적으로 논리를 전개했다는 지적은 동감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개방식에 의해 두드러진 문제점은 본인의 능력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며 앞으로 이를 더욱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훌륭한 지적에 감사드린다.

第 2 會議

司會：金俊燁

發表：廖光生，陳一新，崔相龍

討論：江炳倫，張公子，崔寬藏，李光麟

〈發 表〉

廖光生：본 논문은 1949년부터 毛澤東이 사망한 1976년까지의 기간동안 중국에서의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본 주제에 접근하는 연구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논문들이 제도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본인은 주제자체가 이념적 성격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관제로 이념적 접근방법을 취하였으며 중국에서의 이념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인이 여기서 말하는 민족주의는 정치학 일반에서 공통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결정적으로 중국 공산주의를 정의하는 것은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중국 공산당이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데에는 개인적으로 다음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소련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국제주의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국민당과의 대립에 있어서 중국의 정통성을 강화시키자는 것이다.

중국의 민족주의는 중국공산주의 이념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반면, 중국의 공산주의는 초기부터 민족주의적 정신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Chalmers Johnson의 지적처럼, 중국의 민족주의는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농민세력 동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산주의는 민족주의보다 反帝國主義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1920년대 초부터 延安시대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세력과 국내의 반공산주의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농민세력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민족주의를 하나의 선전도구로 삼았다. 더우기 毛澤東은 반 제국주의를 혁명을 위한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비록 제국주의 이론은

Lenin에 의해 정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Lenin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이해되고 적용되었다. 중국에서의 제국주의이론은 민족주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毛澤東에 의하여 矛盾論으로 발전된 것이다. 毛澤東에 의하면, 중국과 외세사이의 모순과 중국내의 봉건주의에서 대두되는 모순, 이 두가지가 당시 중국에서 중요시되는 모순인데 그중에서도 전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모순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이는 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공산주의에서는 이러한 반제국주의적 시각이 하나의 이념으로 자리잡았으며 국내문제해결에 있어서도 하나의 지침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반제국주의는 중국의 공산주의 이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의 반제국주의는 점차 반미감정과 반서구감정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이상의 반미감정과 반서구감정 등으로 표현되는 반제국주의를 정치적 발전에 이용하였다. 중국공산당은 194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치운동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그들은 반서구감정을 이용하여 서양세력 뿐만 아니라 서양과 관련된 중국지식인들을 모두 우익분자로 몰아 숙청함으로써 정치적 반대파를 효율적으로 제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탄압과정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 민족주의라고 부르짖는 반 제국주의를 이념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반제국주의는 하나의 정치적 무기였던 것이다.

한편, 반제국주의적 이념은 국내적으로도 작용하여 중국의 국내정치 발전에 있어 극단적인 左翼化傾向을 초래하였다. 지도자들에게 좌익화경향은 혁명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고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정치적 탄압을 가할 수 있는 이념적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따라서 정치적 갈등과 투쟁이 증가할 때마다 정치는 더욱 좌경화되어 갔고 그에 따라 반제국주의 성향도 깊어져 갔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내정치적 측면에서도 반제국주의, 반미주의, 반서구주의를 포함하고 있는 중국의 민족주의는 집권

세력의 반대파와의 정치투쟁에 있어서 정치적 무기가 되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민족주의는 반제국주의와 반미감정 그리고 반의세주의 및 권력투쟁 등과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지도자들은 이러한 이념을 토대로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시키고 반대파를 탄압했던 것이다.

이념적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국의 공산주의 이념은 두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론적 부분으로서 Marx-Leninism 이고 다른 하나는 毛澤東思想과 혁명경험, 반제국주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의 안정된 정치체제의 결여는 그들의 이념과 연관되어 있으며 지배정당의 정통성 확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중국에서의 이념은 지배자의 정권유지의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그들의 선진을 위한 도구로 이해되고 적용되었다고 생각한다.

陳一新: 본인은 앞서 발표하신 廖光生 교수님에 이어서 시기적으로 毛澤東死後의 중국에서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및 민주주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민족주의 세력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나는 독자적 민족주의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서구적, 즉 서양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민족주의 세력이다. 전자에 속하는 학자들은 서구로부터 자본과 기술유입을 억제하고 자력경쟁을 통한 강대 중국건설을 주장하는 극단적 민족주의자들과 서구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되 중국현실에 맞는 경제정책을 수립하자는 절충적 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되며, 후자에 속하는 학자들은 서구식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정책을 모방할 뿐만 아니라 강대 중국건설을 위하여 서구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세력이다.

1949년 중공이 건국된 이후, 전반적으로 독자적 민족주의자들이 중공

의 모든 경제적, 정치적 분야를 지배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毛體制下에서는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이 우세하였으나 毛死後에는 절충적 민족주의자들이 득세하였다. 毛體制下에서는 ‘人民民主專政’이라는 개념주장이 毛體制的 지도력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으나 鄧小平體制下에서는 社會的 民主主義라는 것이 중시되었다. 鄧體制下에서도 ‘人民民主專政’에 의한 당의 지도력 강화가 강조되었지만 정치제도의 기능확대 및 당과 정부의 권력분립 등의 문제도 중요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기존의 지배관계에 변화를 가져옴이 없이 당의 지배를 강화하는 것과 강력한 당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과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독자적 민족주의세력은 자연히 반민주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다.

한편, 서구적 민족주의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에 의해 권력강화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예를 들면 毛澤東은 百花運動과 1957년의 정풍운동 및 文化大革命期間동안에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들을 악용하였으며 鄧小平은 凡是派제거를 위해 그들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제 2 절에서는 1986 년도에 발생하였던 독자적 민족주의자들과 서구적 민족주의자들 사이의 투쟁을 정리하였다. 1986 년 여름에, 양자간에 정권을 둘러싼 열면 논쟁이 있었는데 두세력중 하나는 鄧小平을 지지하는 집권세력과 당 지식층으로 구성된 세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학생들의 지지를 받는 지식인세력이었다. 그들간의 대립은 전자의 사회적 민주주의 구현주장과 후자의 서구식 민주주의 구현주장 사이의 의견충돌이었다. 그러나 서구식 민족주의자들은 중국에서 서구식 민주주의가 구현되리라는 것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왜냐 하면 그들에게는 권력기반이 없었으며 대다수의 군중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제 3 절에서는 중국의 민주주의과정에 있어서 부르조아 자유화에 대한 투쟁의 영향을 논하였다. 실제로 제 12 차 당 중앙위원회 제 6 차 대회에서는 새로운 해결책이 채택되었다. 해결책은 종래의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

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반민주주의적이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것은 여전히 Marxism에 입각하였고 4대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공의 지도자들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노선변경을 거부하고는 있지만 전국적인 반부르조아지 운동은 중국 민주주의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은 권위적인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적 민주국가로 변화하고 있는 Marx-Leninism에 입각한 사회주의국가라는 데에는 의심할 바 없지만, 현재의 반부르조아지 자유화운동은 중공의 정치제도나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확언컨대, 현재의 운동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毛死後의 중공은 독자적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하던 사회주의국가로부터 더욱 멀어질 것이며 서구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던 서구적 민족주의자들의 목소리도 점차 작아질 것이다.

崔相龍 :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내용의 반복적 발표는 지양하고 이러한 주제를 다루게 된 필요성과 연구결과 개인적으로 느낀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吉野作造를 분석하게 된 이유는 다음 네가지이다. 첫째는, 한국이 서양사상을 받아들임에 있어 일본의 영향이 컸음으로 한국의 서양사상 수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서양사상 수용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일본의 여러 사상가들 중에서 大正期の 대표적인 사상가인 吉野作造를 연구하게 되었다. 둘째, 吉野作造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많기는 하지만 그러한 연구들은 대개 두 가지 관점에서 행해졌는데 하나는 좌경적 시각에서 일본근대사를 해석하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비 Marxism계통의 연구인 바, 이 두 가지 시각이 극단적인 대립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즉, 본인은 개인적으로 양자의 견해를 종합하여 객관적인 해석을 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본 연구에 임한 것이다. 따라서 大正期를 분류하는 방식은 좌경적 연구방식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非 Marxism적 시각을 받아들였다. 세째, 일본 근대사의 인물이나 사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좌파 내지 우파의 공통된 특징 하나가 ‘日本一國主義’이다. 즉, 그들은 일본만을 보기 때문에 일본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역사적 문제라든가 세계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연구에서는 한국문제가 거의 제외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더우기 吉野作造는 당시 학자들 중에서도 한국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일본학자들은 그가 언급한 한국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를 좀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吉野作造는 그에 대한 방대한 연구에 의한 평가보다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역시 다른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모순에 빠져 있는 사상가라고 생각되었다. 즉, 그는 여러측면에서 상당히 양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그는 학문과 종교 및 정치에 대하여 다분히 양면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예를 들면, 한편으로는 기독교에 매료되어 기독교의 낙천주의적 인간관과 철학적 원리를 주장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현실적 입장을 견지하는 무매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는 소수에 의해 정치가 좌우된다는 의미의 귀족주의를 주장하면서도 대중주의적 기반을 중시하는 대중주의적 귀족주의를 강조하였다. 용어상으로는 귀족주의와 대중주의의 절충을 꾀한 것 같으나 과연 그가 사상적으로 양자의 딜레마를 극복했는지 의문이다.

민주주의와 제국주의에 관한 문제에서도 그의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다. 大正민주주의의 시기는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활발히 꽃을 피우던 시기였지만 한편으로 가장 제국주의적 흐름이 강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양극적 시대상황에 처한 吉野作造는 그의 사상에서 대립되는 개념의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국 및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태도에서도 딜레마를 발견할 수 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한국에서의 민족주의 운동에 동감하지만, 민족주의 운동을 위한 폭

력적 방법에는 반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가지 논리를 통해 중국과 한국에서의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자치를 주장하기도 하고 식민정책의 개혁을 건의하기도 하면서 일본의 '보호자적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압현주의적 입장'에서 5·4 운동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보이면서도 일본의 21개조 정책에 대하여는 지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점은 여운형에 대한 평가이다. 여운형은 1919년 한국 임시정부의 우파지식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초청을 받아들여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회나 여러단체에서 한국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던 바, 현재 일본에는 이에 관한 방대한 자료가 있고,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吉野作造는 여운형의 연설을 듣고 한편으로는 도덕적인 입장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일관되게 지지하면서도 해결책을 자치라든가 식민통치의 개혁 등으로 제시하는, 다분히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吉野作造의 양면성은 자신의 고유사상인 민본주의의 확대판이면서 민본주의의 한계를 스스로 노출시킨 것이 아닐까 한다. 또 일반정치학적 이론으로 보면 정치에 있어서 힘과 도덕의 문제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본론 부분을 간단히 요약하면, 본인은 세가지 관점에서 그의 사상을 분석하였다. 첫째, 종교와 정치 및 신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신앙과 학문의 면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과학과 이성 및 신앙에서 제시되는 문제들을 헤겔의 철학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래도 그는 나름대로 갈등을 어느 정도 극복하였으나 그것은 원리적인 것이었고 정치에서는 다분히 현실적인 측면을 보여 주었다. 즉, 그는 근본적으로 원리와 현실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는, 민본주의 사상의 핵심을 다루었는데, 그는 민본주의 핵심의 수정으로서 두가지를 이야기 하였다. 하나는 우익으로부터의 반론에 의한 수정으로서, 우익이

황실중심주의와의 연결에서 민본주의를 주장했다면 吉野作造는 황실주의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의 도전에 대한 극복으로서 사회적 민본주의로 자신의 사상을 수정한 것이다. 세째, 제국주의와 관련하여 吉野作造는 일본의 침략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의 일환으로서 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장을 견지한 것이었다.

〈討 論〉

江炳倫: 우선 廖교수님의 논문에 관하여 토론하겠다. 廖교수님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발표해 주셨는데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집행하였던 反帝國主義政策과 그 이념에 대한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중국공산당이 반제국주의 이념을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정치적 무기로 이용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논지를 선명하게 잘 부각시켰다고 생각한다.

廖교수님은 반 제국주의를 실질적인 민족주의라 하셨는데, 여기서 중시되어야 할 사항은, 중국의 민족주의는 외세의 여러가지 위협에 대하여 다양한 대응양식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공산당의 지도자들도 중국을 강력하게 하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가지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공통적으로 반외세적 이념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한때, 중국국민당에 의하여 비민족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진정한 민족주의자들이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1950년대 초반에 反美主義를 내세웠으며 1950년대 말기에는 反蘇主義를, 1960년대 초에는 反 India 政策을 내세웠다. 이러한 일련의 反外勢의 政策은 그들이 국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중국문제에서 외세를 배척하기 위하여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중국의 근대화과정에 있어서 지식인들간에 상당한 견해차가 있었기는 하지만, 그것은 접근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우익이든 좌익분자든, 민주주의 신봉자

든 공산주의 추종자들간에 당시의 모든 중국지식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廖교수님은 중국에서의 민주주의문제를 결론 부분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셨는데, 이를 좀더 분명하게 논술했으면 더욱 의미가 있었으리라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하고 싶다. “왜 중국의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성숙되지 못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의 민주주의는 두가지 장애요소 때문에 성숙되기 어렵다고 한다. 하나는 확고한 공산주의 이념이다. 중국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또는 Lenin의 당 조직원리에 입각한 당의 중앙집권화 등의 지배 원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체제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요소는, 중국의 민주주의는 민족주의와 결부되어야 하는 동시에 민족주의를 보조하여야 한다는 중국적 특수상황이다. 이러한 장애때문에 중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성숙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견해에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陳교수님의 논문에 대하여 한가지만 언급하겠다. 陳교수님은 본 논문에서 민족주의자를 Oksenberg의 이론에 입각하여 구분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분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근대화과정 초기에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도 나름대로 다양하고 특색이 있었다. 따라서 본문에서 택한 분류방법이 의미상으로는 분석편의상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의 사상적 흐름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분류도 고려해 보직하라고 생각한다.

張公子 : 두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느낀점은 결론 부분에서 서로 같은 뜻이면서도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가 중국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한 대륙에서의 민주주의 구현은 어렵다는 것이 廖교수님의 결론인 반면, 陳교수님은 현재 중공에서 부르조아 자유화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구식 민주주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나갈 것이라고 시사하였다. 결국, 두 논문은 중공에서의 서구식 민주주의의 구현은 어렵다고 결론짓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다른 점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선, 陳교수님에게 두가지를 질문하겠다. 첫째, 薛教授가 쓴 「中國政治思想史」라는 책에서 보면 중국의 정치사상을 4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창조시기, 인습시기, 정변시기, 성숙시기가 그것이다. 그는 성숙시기를 1911년 손문의 혁명에서부터 잡고 있으며 민주화와 혁명을 당시의 특징으로 삼고 있다. 한편 Conte는 지식의 발전사를 세단계로 잡고 있는데, 세단계중 중시해야 할 단계는 마지막단계인 Positive Stage이다. 그에 따르면, 이단계에서 지식은 과학이나 비경험적인 것, 즉 실사구시적 측면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중국사회와 상호 연관시켜 본다면 바로 청말에서 민초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즉, 중국에서의 사상의 흐름은 이미 성숙의 단계 내지는 실증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비록 민주화 문제가 중국의 공산주의때문에 제약받고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서구적 민주화의 가능성은 많아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양의 발전단계에서 암시하는 바와 국제사의 흐름을 고려해 볼 때 서구적 민주주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陳교수님은 중국공산당시기의 민주주의 문제만 국한하여 발표하셨는데, 본 회의의 주제가 민주주의의 수용과 갈등이므로 1911년 이후의 중화민국에서의 민주주의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화민국을 성립시킨 손문은 전통적인 것에 서구의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삼민주의를 만들어 내었고, 삼민주주의의 내용 속에는 전통적인 요소와 서구적 요소가 함께 강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사상적 내용을 앞에서 언급한 사상의 발전단계와 지식의 발전단계에 결부시켜 볼 때, 1911년 이후의 중화민국은 성숙기 내지 실증기에 해당하므로 당시의 민주화문제도 언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陳교수님의 견해에는 대체로 동감한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국은 외래문화수용에서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문화수용 특히 공산주의 수용단계에서 중공인민들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공산주의의 지배하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언급해 주었으면 좋았으리라는 생각한다. 만약 완전하게 공산주의의 지배하에 있다면 별 문제이지만 전통적인 색채가 있다면 서구적 민주주의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사려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현 중공에는 전통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모택동이 생전에 중국의 사회주의를 중국 고유의 사회주의라고 강조한 점이라든가, 모택동 사후 공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중국에서의 공산주의는 전통의 현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 陳교수님의 견해대로 지금은 비록 서구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소리가 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구식 민주주의도 자연스럽게 중국사회에 흡수되어 중국적 민주주의로 변형되어 나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

崔寬藏: 우선 廖교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다. 첫째, 본 논문에서는 민족주의와 반제국주의의 역사적 배경 가운데에서 중국공산당 성립초기와 항일전쟁시기의 이론 전개만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보다도 청말이래 중국 인민들이 지니고 있었던 새로운 민족주의 감정과 반제국주의 감정 등의 이론적 토대도 언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1918년부터 시작된 코민테른의 민족주의 전략관계 그중에서도 1919년 소련의 카라얀선언이 중국 인민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사회주의에 대한 중국인민의 사고를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공산당은 과거 집권세력에 대한 도전세력이었을 때 내세웠던 반외세주의적, 민족주의적 구호와 이론을 집권후 통치집행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나갔다. 따라서 그들의 통치스타일은 다분히 반외국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반외세라는 혁명과정의 구호가 통치

과정에서 반외국주의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세째, 교수님은 毛澤東의 反帝理論을 계급투쟁과 연관시키는 한편, 그것이 실용적 이데올로기로서 정치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이에 동감한다. 즉, 反帝理論은 毛澤東의 혁명이론과 통치이론의 기초가 된다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毛澤東의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오늘날의 평가를 증시해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1981년 6월 27일 제 11기 6중전회에서 통과된 소위 '역사결의'를 통하여 毛澤東理論이 오류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모택동의 계급투쟁론에 대한 작금의 비판도 첨가시켰으면 한다.

네째, 본문에서는 권력투쟁과 좌경주의를 거론하면서 대약진운동의 실패원인을 인간요소로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견해에 동감하지만, 사회주의운동의 집행과 결과에 대한 평가측면에서 인간적 요소 즉, 개인적 의지에 대한 고려가 좀더 자세히 언급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다섯째, 중국공산당의 정치운동 역사가 모두 反右傾運動이라 하셨는데 중국공산당의 운동을 모두 右傾運動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면, 4인방에 대한 비판운동, 反汎是派運動, 1980년대초의 사회주의 이론에 관한 논쟁 등은 反左傾化運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좀더 명확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중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내리셨는데,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중공의 민주화 문제는 다분히 상대적인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서구식 민주주의는 아니고 사회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중공이 장래에 민주화과정으로 접어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陳교수님의 논문에서는 毛澤東이 사망한 이후 새로이 등장한 민족주의세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등장배경을 설명하지 않으셨는데 이를 보충하여 주셨으면 한다. 또한 서구식 교육을 받은 민족주의자들 속에 동

유럽에서 교육받은 지식인들도 포함시킨 것인지 알고 싶다.

李光麟 : 崔相龍 교수님의 논문에 대하여 토론하겠다. 우선 교수님의 논문을 매우 흥미롭게 읽었고 논문을 통해 배운 바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며, 동시에 한국에서도 일본의 역사와 정치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자가 많아진 것을 매우 흐뭇하게 생각한다.

吉野作造는 당시 군국주의가 팽배하던 일본에서 과감하게 한국문제를 언급한 용감하고 대단히 신념에 찬 인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崔교수님이 “吉野作造는 大正民主主義 시기의 기수였다”라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는 당시의 많은 사상가와 정치가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첫째, 일반적으로 大正民主主義라고 하는데 과연 大正期에 民主主義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물론 明治期の 과두정치에 비하면 확실히 정치체제상 민주화된 부분이 있었기는 하지만, 과연 민주주의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崔교수님이 吉野의 민본주의 사상의 수정을 말씀하셨는데, 그의 사상이 변화한 데에는 러시아의 2月革命과 10月革命 등의 영향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를 묻고 싶다.

세째, 吉野作造가 사상적으로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는 확실히 신념에 찬 인물이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사람이었다. 그의 이러한 양면적이면서 복잡한 사상을 과연 학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그의 양면성에는 에비나목사와의 관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그의 기독교에 관한 사상적 수용에서도 두드러지는 것이다. 이를 좀더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答 辯〉

廖光生 : 본 논문의 기본적인 논지는, 중국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개념

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張교수님과 崔교수님의 질문을 묶어서 답변하겠다.

張교수님은 薛교수의 4 단계 분류를 언급하셨는데, 그의 이론의 康有爲가 제시한 원칙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그들이 중시했던 것은 사상이나 이성 등이었지 정치적 측면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사상이나 지식의 차원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중국에서의 정치가 그다지 발전되지 못하였다. 중국은 오랫동안 왕조에 의한 통치체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근대적 의미의 정치가 적용되지 못하였다. 더우기 전통적 사상체제인 유교는 중국에서의 민주적 정치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였다. 유교는 황제에 대한 충성과 종속관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현대민주정치에서 중시되는 정치적 반대의 존속이나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부정한다. 또한 민주정치는 개인주의적 사고를 토대로 발전하지만 유교체제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철저히 규제된다. 이러한 전통적 정치이념이 중국사회를 계속 지배해왔기 때문에 정치적 발전을 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청조 말기에서부터 공산당집권기에 이르기까지 정치구조적 측면에서도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퇴보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통치의 기본이 되는 법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치는 지배계급의 의도와 그들 나름의 해석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에게는 권력분립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민주정치 체제유지의 기본적인 여건이 되는 정치세력간의 조화와 협조체제의 구축보다는 집권 세력의 권력확대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전상 중국에서의 민주정치 수용은 무려 어려웠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다음으로, 중화민국의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삼민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및 서구적 자유주의를 모두 수용하여 중국적 상황에 적용시킨 것이다. 그러나 삼민주의는 중국의 전통사상을 많이 내포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서구적 자유주의 정신의 거대한 틀속에서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끝으로, 대만문제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겠다. 현재 대만은 상당한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다. 대만은 한동안 중공의 무력적 위협 앞에 상당히 통제된 민주지배체제를 고수해 왔으나, 경제발전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정치적 요구에 직면하여 반대당결성을 허용하는 등 파란만장한 정치적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비록 완전한 서구식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대만은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陳一新 : 본 논문에서 채택한 민족주의자 분류에 대한 江교수님의 지적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류를 단순화시킨 경향이 있으므로 차후에 이를 보완하도록 하겠다.

張교수님은 저의 결론을 상당히 낙관적인 것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저는 논문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달성여부에 대한 전례를 피력한 것이라기 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시켰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 단지, 중국의 민주주의 장래가 현재의 정치운동과 지식인들의 주장정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을 뿐이다.

崔교수님은 鄧小平을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의 등장배경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그들은 문화대혁명으로 실추된 당의 권위와 붕괴된 정치체도를 재건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내세우며 등장하였다. 그러나 정권의 수립과 정치체제의 효율성 증대보다 더욱 중시한 것은 당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일이었다. 결국, 그들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제반의 정책을 수립, 집행하면서 성장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서구에서 교육받은 민족주의자들의 범주에 소련이나 동유럽에서 교육받은 민족주의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논문에서 말하는 서구에서 교육받은 민족주의자란 순수하게 서구식 민주주의를 배운 지식인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소련이나 동유럽에서 교육받

은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을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司會(金俊燁) : 崔相龍 교수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우선 본 회의에 참석한 일본학자로부터 吉野作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도록 하겠다.

北岡伸一 : 吉野作造의 사상이 양면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데에는 대체로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그의 사상이 성숙되면서 차츰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는 袁世凱의 초청으로 중국에 건너가 袁世凱의 아들의 가정교사를 했을 당시에는 중국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915년의 21개조에 대한 자신의 지지는 실수였다고 후에 고백하였다. 또한 그의 중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동조적 관심은 1920년대에 들어서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그의 사상에 있어서 양면성은 관심사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가 학자인 동시에 때로는 Journalist였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는 여러가지 주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여러 잡지에 게재하였는데, 그가 작성한 다수의 글들은 다양한 평가를 받았고 한편으로 많은 부분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가 양면적이라고 규정지우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崔相龍 : 李교수님이 첫번째로 제시하신 “과연 大正民主主義라는 표현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일인 동시에 복잡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大正民主主義를 시기별로 나누어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大正民主主義의 준비기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입헌주의에 의하여 제국주의가 옹호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다분히 비민주적이고 모순에 찬 시기였다. 그후 吉野作造가 중심인물로 활동하는 제 2기에서도 제 1기의 성향이 완전히 제지되지 않았기 때문

에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그러나 1 단계에서는 입헌주의가 제국주의의 유용한 도구가 되었는데 비하여 2 단계에서는 입헌주의에 대한 지지가 제국주의에 대한 지지보다 더욱 강해진다. 따라서 상대적인 의미에서 1 단계보다는 훨씬 민주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단계는 서구적 민주주의가 토착화되기 이전에 밑으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하여 이른바 사회주의적 요구까지도 포함하는 민주주의가 대두된 시기였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大正民主主義時期는 진정한 의미의 서구적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이전에,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입헌주의가 지배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사회주의적 색채까지도 포함한 민주주의가 대두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시대였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大正民主主義는 급진적인 공산주의와도 다르고 명백한 제국주의도 아닌 민본주의 사상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점에서 일본적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던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비록 당시에 제국주의적 요소가 많았기는 하였지만, 일본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당정치가 출발하였던 시기가 바로 大正期였기 때문에, 상대적 의미에서 이 시기를 일본이 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시기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둘째로, 李敎수님은 吉野作造의 민본주의 2차수정에서 러시아혁명의 영향유무를 물어보셨는데, 그러한 혁명의 영향은 상당히 강했다고 여겨진다. 大正期의 지식인들 사이에는 러시아혁명 이후의 사회주의적 사조가 하나의 유행이었고 사회주의를 연구하고 이를 민주주의와 연관시켜 보는 것이 하나의 풍조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吉野作造는 자신의 민본주의적 체계와는 거리를 두면서 첨예하게 사회주의를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에비나복사는 두가지 점에서 吉野作造에게 영향을 주었다. 하나는 기독교이고 다른 하나는 헤겔 철학이다.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헤겔 철학에 대해 말하자면, 헤겔은 계몽주의적 이성주의와 낭만주

의를 종합한 철학자였다. 그는 상호 갈등적인 신앙과 이성의 문제를 그의 철학에서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국 조화시키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吉野作造는 이러한 헤겔철학에 영향을 받은 바, 그의 사상적 체제에 있어서도 얼버무린 막연한 부분이 있다.

다음으로, 江 교수님이 중국문제에 관한 토론 중에서 제시한 두가지 문제 즉, 민본주의 문제와 식민통치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하겠다. 우선, 교수님은 민본주의를 중국의 전통적 개념이라고 하였고, 많은 학자들이 동일한 시각으로 吉野作造의 민본주의 사상을 전통적 유교사상의 부활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吉野作造는 중국의 전통사상에서 민본주의적 개념을 받아들였지만 나름대로 이를 독특하게 발전시켰다고 평가하고 싶다. 둘째, 吉野作造는 한국과 중국에서의 민족주의 운동에 동정적이었다라는 江 교수님의 지적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그는 민족주의 운동을 지지하고 그것의 필요성을 통감하였지만, 식민통치 자체의 철회는 주장하지 않았다.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단순히 자치확대나 통치체제의 개혁 등 다분히 미온적인 것이었다.

第3會議

司會：梁好民

發表：劉載天，徐大庸，金學俊

討論：元佑鉉，金南植，陳德奎

〈發 表〉

劉載天：이 글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수용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 신문들에 반영되어 있는 민주주의 가치를 분석하려는 장기적인 연구계획의 첫 번째 단계로서 독립신문에 한정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를 묶어 놓은 것이다.

본 연구는 가치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논문 앞부분에서는

가치에 대한 학자들의 일반적인 개념정의를 정리해 놓았다. 본문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정의를 종합하여 여기에서는 가치를 “선택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적 상징으로 개인과 집단의 추상화된 願望이며, 사회적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 목표 혹은 의도의 한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의 주제를 좀 더 선명하게 논술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여러 정치학자들이 규정해 놓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개념정의를 종합하여, 공통적으로 요약되는 자유, 평등, 주권재민 등의 세가지를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세가지를 민주주의의 가치로 보고, 그러한 가치들이 독립신문 논설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분석해 보았던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내용분석방법중에서 개량적 분석방법은 지양하고 질적 분석방법을 채택하였다. 왜냐하면, 논설에 나타난 가치와 관련된 주제들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때로는 복합적으로 때로는 반복적으로 주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개량화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까닭이다. 또한 이 연구가 추세분석도 아니고, 다른 주제와 관련시켜 민주주의 가치를 부각시키려는 분석도 아니며, 단지 민주주의 가치중 어떠한 것들이 독립신문에 나타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기에 개량화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질적 분석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질적 분석을 함에 있어서 분석범주로 삼은 것은 앞에서 제시한 민주주의의 세 가지 가치 즉, 자유, 평등, 주권재민이다. 그런데, 이를 좀 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하여 본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가치마다 하위범주를 정하고 나서 각 논설에서 뽑은 주제(theme)를 분석단위로 삼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유가치중에서는 신체적 자유가 가장 많이 강조되어 있었다. 신체적 자유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최형법정주의 제창, 재판울 공평히 받을 수 있는 권리주장, 연좌제, 고문제도 등의 폐지주장

등이다. 한편, 정신적 자유에 대한 주장은 대체로 표현의 자유와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가 크게 강조되었다. 즉, 독립신문은 논설을 통하여 보도의 기능, 비판의 기능, 계몽적 기능 등을 신문이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정치적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 등이 주장되었다. 독립신문은 공개정당의 형성에 의한 여론정치의 실행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당결성의 자유와 그것의 장려를 주장하는 한편, 양당제도의 필요성까지 암시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유에 대한 가치중 사회적·경제적 자유 부분에서는 재산권의 보장이 강조되고 있었다. 개인의 재산은 보호되어야 하며 정부는 재산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조세제도를 개선하여야 하고 백성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독립신문의 논점이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자유에 대한 논의는 여타 자유와 관련된 논의들 중에서 가장 비중이 적었다는 점은 특이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평등과 관련된 논설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시되었다. 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의 밑바닥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기본사고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평등도 신분의 평등, 남녀의 평등, 사회적 평등 세가지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신분상의 평등문제에서는 천부인권주장과 관련되어 신분제도의 철폐가 강력히 주장되었다. 한편, 남녀의 평등에서는 性差異에서 오는 모든 차별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여성에 대한 억압철폐주장, 동등한 교육기회 부여 주장 등이 돋보였다. 그러나, 신분상의 평등과 남녀의 평등에 대한 언급은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평등은 거의 강조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主權在民은 참정권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독립신문은 인민이 나라의 근본이고 주인이라고 강조하면서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주장하는 국민주권론을 폈다. 국민주권론에 대한 강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공무담임권), 대의제에 대한 주장으로 구체화되었다. 우선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하여 독립신문은 지방관서의 장을 직접 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곧 지방관서의 장은 일반백성들 가운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독립신문은 대의제를 주장하면서 의회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신문에서 말한 의회는 기본적으로 양원제를 의미하였으나, 중추원을 상원으로 개편하는 것을 급선무로 보고 하원구성은 급하지 않다고 보았다. 독립협회의 정치적 견해를 반영한 이러한 주장은 민중의 지지가 약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당시 독립신문에 나타난 민주주의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사회구성원들의 가치로 내면화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본 연구가 단순한 문헌분석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다만 1세기 전부터 이미 민주주의의 주된 가치들이 강조되었다는 점을 중시해 볼 수 있었다. 또한 1세기전부터 주장되어 오던 문제들이 현재에 이르러서도 계속 강조되고 있는 바, 이는 곧 아직도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러한 점을 좀더 숙고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 한가지는 당시가 군주제와 유교적인 가치에 의하여 지배되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가치가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독립협회의 강한 용기를 엿볼 수 있었으며, 그러한 만큼 반발도 심했으리라 여겨졌다.

徐大肅 : 민족주의라는 방대한 주제를 짧은 시간내에 발표하고 토론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일이다. 또 한편 이제까지 여러 분야에서 이미 민족주의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따라서 많은 기존의 연구에 단순히 덧붙인다는 의미로 민족주의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기존의 학자들이 지니고 있던 시각과는 달리 다소 서구적인 시각으로 민족주의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라든가 국기 및 국가가 행하는 국민에 대한 모든 교육

정책, 징병제도 등은 모두 민족주의의 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 민족주의는 국민을 통합하는 측면에서 국가에 도움을 주는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만큼 국가에 해가 되는 나쁜 점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오늘날 아마도 가장 민족주의를 필요로 하는 역사적 시점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방안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민족주의적 선택이 가장 절실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북한의 공산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 사이의 갈등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하겠다. 사상체제적으로 양측의 이념을 논하겠는데 북한의 사상체제로서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다루었고 한국에 대해서는 朴正熙대통령이 집권한 제 3,4 공화국의 통치이념에 초점을 맞추었다.

오늘날 북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체사상은 그것이 등장했던 당시의 내용에서 많은 부분이 변화된 것이다. 주체사상은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에 의하여 처음 주장되었는데, 당시의 주체사상은 反蘇親中路線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마치 김일성의 탁월한 사색의 결과로 나온 독자노선인 것인양 인식되는데, 사실은 소련을 멀리하고 중공과 가까이 지내려는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을 민족주의의 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따라서 비록 여러가지 측면에서 주체사상 자체를 쉽게 비판할 수 있지만, 주체사상이 민족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주체사상이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 다음 세가지만 지적하겠다. 첫째,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주장하면서 한국의 역사 속에 나타난 민족주의 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역사보다는 김일성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었다. 예를 들면, 일본 유학생들의 6·10 만세사건, 일제에 대한 광주학생의거 등의 정정보다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이 더 중시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출간된 「조선전사」

를 보면 전 33 권중 한국역사물 취급한 부분은 15 권에 불과하고 나머지 18 권에는 김일성의 개인적 혁명역사가 정리되어 있다. 둘째, 주체사상은 초기 反蘇親中路線을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反蘇보다 反中이 강조되었어야 옳았다. 왜냐하면, 蘇聯이 북한에 미친 영향보다 중공이 북한에 미친 영향이 훨씬 지속적이었고 방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이 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反中이 강조 되었어야 한다. 셋째, 북한은 제 3 세계에 대하여 주체사상을 마치 Marx-Leninism 과 같은 종합적 사상 체계인양 선전하고 있는데 주체사상은 북한에만 적용될 성질의 사상체계이다. 따라서 김일성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주체사상을 국제상황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도래하지 않았다. 5·16 혁명 당시 朴正熙대통령은, “우리가 혁명하는 것은 동학란, 3·1 운동 및 4·19 학생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한, 다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발언이다. 왜냐하면, 동학란은 농민 운동으로서 하나의 국란으로만 규정되어야 하고, 3·1 운동은 종교세력에 의하여 주도된 항일운동이었지 정치적 세력에 의한 정치운동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인에 의한 혁명을 종교적 운동으로 정당화시킨다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 더우기 전국민이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출시킨 4·19 학생운동을 군사혁명에 적용시킨다는 것에도 문제가 많다. 결국, 5·16 혁명이 과거 민족주의적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5·16 혁명세력이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그것을 어느정도 달성하였다는 사실에서는 나름대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막상 朴正熙대통령이 남긴 유고를 분석해 보면 그가 민주주의를 전혀 몰랐던 것 같지는 않다. 그는 민주주의가 취해야 하는 기본정책을 잘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정권유지를 위하여 이를 유보하였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결론을 대신하여, 白南雲氏가 자신이 쓴 「朝鮮民族의 進路」라는 조그마한 책자에서 제창한 ‘聯合性 新民主主義’를 소개하겠다. 그가 제창한 ‘聯合性 新民主主義’는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조선은 완전한 민족해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민주주의를 한국의 정치이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민주주의적 민족경제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金學俊: 본인이 정치학자로서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을 어떠한 계기 또는 과정을 통하여 수용하게 되었는가”라는 의문이다. 이같은 이러한 주제에 관한 일련의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해방전후에 활동하였던 우파정치지도자들의 자유민주주의 수용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李承晩, 申興雨, 金九 이상 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申興雨의 경우, 그는 나머지 두명의 지도자보다 격이 떨어지고 보는 이에 따라서는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연구는 李承晩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보조적인 의미를 충분히 지니고 있으며, 그가 해방전후의 우파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자유민주주의나 공화주의 사상이 활발하게 수용된 것은 독립협회를 통해서였다는 사실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즉,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주도한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서구로부터 도입하고 민중에게 전파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나 공화주의 사상이 반드시 서구로부터 도입된 사상은 아니었다. 당시 조선사회가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서 국내의 학자나 사상가,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사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인식은 특히 개신유학적 학풍을 지닌 지식인들로부터 성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협회는 두가지의 사상적 흐름이 합쳐진 것이었

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서구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고 그것을 조국에 도입하려는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당시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화체제를 받아들여 한다고 인식한 세력이었다. 이러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사상과 운동은 확실히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전파·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독립협회는 1898년에 탄압에 의해 해체되고 만다.

대한제국의 멸망과 일제식민지로의 전락 등의 과정속에서도 비밀결사 단체인 新民會는 독립협회가 지녔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계승·발전시켰다. 그러나 新民會 역시 일제의 탄압을 받았으며, 이에 新民會 간부들은 만주로 이주 또는 망명하였다. 그들은 新民會를 바탕으로 耕學社, 扶民團 등의 단체를 설립하여 독립운동을 구상하고 이를 전파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3·1운동을 토대로 1919년 대한임시정부가 上海에서 설립되었다. 비록 臨政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王政을 복고시키려는 復辟的 民族主義運動의 기운이 남아 있었으나 臨政설립 이후에는 이러한 운동은 서서히 사라지고 공화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正義府 등과 같은 여러 단체들도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정리한 일련의 민족주의 운동단체들은 모두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사상을 계승해 나갔고 이러한 사상적 배경하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성장하였다. 본고에서 다룬 3명의 지도자들도 모두 이에 포함된다. 우선, 李承晩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성장하였다. 그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 참여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수용하였고, 배제학당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기독교와 접하게 되었다. 여러 단체 내지 기독교와의 연관은 그로 하여금 미국적 민주주의의 이념과 미국식 생활철학을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계기를 기반으로 도미하여 정치학과 사학을 공부함으로써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더욱 흡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해방 직후, 李承晩은 ‘一民主義’를 제창한다. 물론 ‘一民主義’를 이론

화하는데 기여한 사람은 제1공화국의 초대 문교부장관이었던 안호상박사였지만, 그것이 李承晩의 정치이념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一民主義’를 정리해 보면, 이것이 순수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었다는 인상을 가지게 된다. 저술에 나타난 ‘一民主義’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두 배격하면서 양자의 중간형태의 이념을 지향한 것 같다. 비록 저자는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두 공격한다 하여 중간형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지만, 중간형태가 아니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분명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申興雨의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李承晩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그 역시 서재필의 독립협회운동과 배제학당에서의 교육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게 된다. 그는 스스로도 서재필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는데, 독립협회의 영향과 배제학당에서의 교육은 자동적으로 기독교와 미국 및 자유민주주의로 연결된다. 申興雨도 李承晩과 마찬가지로 도미하여 정치학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귀국후 배제학당에서 교편을 잡는 한편 YMCA 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농촌부흥운동등을 주도하였다. 비록 申興雨는 중요한 정치지도자로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서재필의 영향이라는 큰 테두리안에서 李承晩과 동일한 민주주의 수용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수용문제를 연구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중요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민주주의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이상 두사람 특히 李承晩과 가장 대조되는 지도자가 바로 金九이다. 金九의 자유민주주의 수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물로 작용한 것은 기독교와 新民會였다. 이것은 李承晩과의 공통점이긴 하지만 李承晩이 미국과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받아들인데 반하여 金九의 출발점은 東學이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후 기독교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新民會運動에 가담하였다. 金九는 비록 ‘自由’라는 개념과 자유민주주의를 늘 강조하였지

만 이데올로기보다도 민족을 더 중시하였다. 그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정치 이데올로기를 초월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를 중시하여 공산주의를 강하게 배격하던 李承晩과는 달리,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비난하면서도 공산당과의 제휴를 꺼리지 않았다. 이는 李承晩과 金九, 각자의 독립투쟁과정 사이에서 나타난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李承晩은 臨政의 초대대통령을 지내기는 하였으나 그의 독립운동무대는 주로 미주였던 바, 당시 미주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유민주주의 운동세력과 함께 활동하였던 것이다. 반면 金九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며,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세력과 제휴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데올로기상의 차이가 중시되지 않았다. 바로 그점때문에 그는 1948년 남북협상을 감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북한의 지도자를 모두 중국에서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민족주의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과의 제휴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결론지어 말하면, 해방전후에 남쪽에서 활동하던 우파정치지도자들은 독립협회, 단민공동회, 新民會, 기독교, YMCA 운동, 미국에서의 교육 등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였다고 요약할 수 있다.

〈討 論〉

元佑鉉: 제목만을 보고는 한국신문의 민주주의의 가치 수용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 한국사회의 가치 수용정도가 신문에 반영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는 당시 민주주의적 사회제도가 미비했던 점에 비추어 논설을 통해 수용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에 대한 분석인지 불분명하였는데, 분문을 읽고 보니 한국신문이 민주주의라는 어휘를 얼마나 수용해서 사용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앞에서 제시한 세가지 문제가 어떻게 논지속에 수용되었느냐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 든다. 이를 좀더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

또, 한국신문이라 하었는데 인위적으로 독립신문만을 선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수용에 있어서 독립협회가 주도적이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는 동감하지만 사회이념이나 가치갈등이 심한 변혁기에 관한 분석이므로 다양한 입장을 대변한 당시의 기타 언론매체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독립신문에만 편중된 분석보다는 사회전체의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수용을 살펴볼 수 있는 표본추출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느낌을 가졌다.

다음으로,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논설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가치와 관계된 용어분석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수용자들의 반응이나, feed-back 내지는 공중의 관심도 등, 독립신문의 민주주의의 가치수용이 사회차원에서 미친 영향 등을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관점이라 생각한다.

한편, 민주주의의 가치분석을 위하여 선정된 범주들은 나름대로 타당성과 유용성을 지니고는 있지만, 당시 이러한 가치범주들이 표출될 수 있었던 기타 사회적 변수를 찾아내어 비교점증을 통한 수용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여겨진다. 예를 들어, 당시 신문논설에서 자주 강조되었던 자주독립 내지는 개화자강사상 등, 특히 자주독립을 강조하는 데에서 제창된 서구문화론에 관한 논설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수용의 Index로서 우리에게 좋은 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개화자강 사상에서 강조되었던 정치적 Index로서의 민권신장론이나, 의회제도도입론, 법치주의론, 관료제 제정비론 등도 민주주의의 수용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변수라 생각한다. 더우기 평등의 문제나 종교 및 언론차원에서도 여러변수를 추출해 낼 수 있는 바, 이러한 변수들과 본문에서 제시한 분석범주를 상호 연관시켜 분석하였더라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었으리라 사려된다.

그리고, 劉鈞수님은 논설의 주제를 분석단위로 삼으셨는데, 일반적으로 당시의 논설은 사전이나 뉴스를 다룬 일반 기사와는 상관없이 시국관이나 지식인들의 개인적 사상 및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찬반논의 등을 다루었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독자들의 견해와는 다소간의 거리가 있었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논설이 일반기사나 기타 신문지면과의 상관관계에서 지니는 의미를 좀더 명확히 밝혀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만약 신문의 논설중에는 현실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것이 많다는 가설을 세워본다면, 수용되지 않은 정도에 역비례해서 논설이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당위성에 대한 주장이 많았다는 것은 당시에 가치수용이라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의 반증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좀더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

金南植: 민족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를 상호 연관시켜 이야기한다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일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추구하고 있는 관계로 민족주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공산주의자들에게 민족적 이익의 입장에 서서 싸울 것을 권유할 수는 있어도, 민족주의를 수용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논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설정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徐교수님의 논문에 관해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먼저, 북한의 주체사상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북한은 초기 Marx-Leninism 을 당의 이념으로 채택했다가 5차 당대회때 Marx-Leninism 과 함께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당의 이념으로 삼았다. 그러다가 1960년 10월에 있었던 6차 당대회에서는 Marx-Leninism 을 빼고 김일성주체사상만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채택함으로써 현재는 주체사상만이 북한공산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주체사상을 과연 민족주의와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제시되는데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주체사상은 정책적으로 자주, 자립 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주체사상을 엄격히 연구·분석해 보면, 결코 민족주의와 아무

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체사상은 물질과 의식의 관계에 기본원리를 두고 있는 Marxism 과는 달리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전제로 이론체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민족주의와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비록 북한은 때로 민족주의에 입각한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전술적인 입장에서 나온 것이지 진정으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그들의 기본정책을 표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의 현재 공산주의에서 탈피하고 주체사상 속에서 지도력을 찾고 있기는 하지만, 주체사상에 대하여 민족주의적이라는 평가는 내릴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공산주의를 민족주의와 연관시켜 해석하신 徐교수님의 견해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북한도 민족주의가 아니고 한국도 민족주의가 아니라 한다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족주의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설명을 첨부시켰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민족에 관하여 지적하겠다. 과연 우리 나라에서 민족형성을 언제부터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을 일정한 역사적 단계의 산물로 본다. 특히, 서구공산주의자들은 서구에서의 민족형성을 대개 자본주의발달과 연결시켜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봉건시대때부터 중앙집권적이었고, 언어와 문화의 측면에서 공동적인 생활이 영위되어 왔기 때문에, 서구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형성에 대한 견해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의 민족형성을 언제부터 보아야 되겠으며, 민족으로부터 어떻게 민족의식이 싹터서 민족주의로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동시에, 현재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족주의는 무엇이어야 되겠는가라는 문제까지 보충설명해 주셨으면 한다.

陳德奎 : 세 교수님의 논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세교수님 각자에게 몇가지를 여쭙어 보겠다.

먼저, 劉교수님에게 세가지를 여쭙겠다. 첫째는 독립신문의 민주주의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인 사회의 반응은 어떠했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독립신문이 민주주의 사상에 대해 보급적인 논리를 전개했을 때, 양반계층, 儒林 및 일반대중들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했는지 궁금하다. 둘째는 논설에 나타난 민주주의 가치들이 소위 근대적 시민사회의 초기 발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상과 연관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고에서 말하는 자유나 평등, 주권재민 등의 가치들이 계몽주의 내지는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초기적 양상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묻고 싶다. 세째, 일반적으로 사상은 사회구조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보면, 당시의 민주주의 가치수용이 단순히 독립협회가 생기고 독립신문이 있기에 그러한 기관을 통해 전달된다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당시 우리사회구조의 일각에서 이른바 상공업체층이 부분적으로 형성되고 등장하는 과정속에서 그들의 논리적 가능성으로 민주주의가 수용되고 전파된 것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徐교수님의 논문에서는 특히 많은 것을 배웠고, 교수님의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분석과 예시 및 가능성 타진 등의 논리에 대하여 많은 것을 공감한다. 그러나 확실히 이해되지 못한 몇가지를 묻고자 한다. 첫째, 白南雲이 말한 新民主主義는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白南雲의 논리는 공산주의적인 민족주의관의 한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白南雲의 논리를 종도적인 한국민족주의의 통합적 가능성의 전제로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徐교수님은 주체사상을 초기와 후기로 나누고, 후기에 비하여 초기 주체사상에는 상당할 정도로 민족주의적 요소가 담겨있다고 하셨는데, 만일 주체사상에 민족주의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의 민족주의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민족주의가 반외세감정만을 논한다면 민족주의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초기 주체사상이 감정적인 차원에서 反蘇의 論理를 전개한다고 해서 민족주의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는 없

다. 진정한 의미의 민족주의는 전통적인 사상체계의 민족주의적 전개발전 내지는 민족의 자주독립과 국가발전 등을 전제로 하여 논리를 현대적인 사상체계로 발전시킨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의 민족주의와 주체사상이 어떻게 접합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란다. 세째, 徐교수님은 麗末鮮初에 우리나라의 민족의식이 성립되었다고 하셨는데 당시는 성리학적인 중화사상이라는 가장 반민족주의적인 의식이 성립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민족주의를 근대 이전과 근대로 나누어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듯 싶다.

마지막으로 金學後 교수님께는 한가지를 여쭙어 보겠다. 그것은 ‘一民主義’ 자체를 李承晩의 사상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一民主義’는 민주주의라기 보다는 일종의 독일적 국가형성과정에 있어서의 민족주의적 의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우기 ‘一民主義’는 梁又正에 의해 쓰여졌고, 원칙적으로 안호상박사의 작품이며 李承晩도 ‘一民主義’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一民主義’가 李承晩에 의하여 주장된 그의 것으로 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答 辯〉

劉載天: 우선 元교수님의 질문에 답하겠다. 수용의 문제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것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러한 모든 사항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1896년 전후시기에 독립신문에만 반영되어 있는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그 효과를 측정할 수는 없으며, 사실상 그러한 효과를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며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독립신문 하나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신문과의 비교가 되어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당시의 한국사회에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하는 문제는 더 연구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다만 독립신문에서 주장된

가치에 대한 공중의 관심사나 독자들의 feed-back 문제에 대해서는 독립신문에 게재된 독자들의 편지를 통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독립신문에는 그들이 주장한 가치에 동의하는 독자들의 편지가 많이 게재되었던 것이다. 물론, 독자들의 편지만을 가지고 민주주의 가치가 공중의 일반적인 관심사항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에 동조하는 독자층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분석범주 외에도 기타 사회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은 새로운 연구제의로 받아들여졌다.

다음으로 元교수님은 논설과 뉴스와의 관계를 질문하셨다. 우리나라의 신문은 서구에서의 신문발생의 경우와는 다른 계기로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서구에서는 사회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문이 시작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제물을 위하여 신문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구한말의 신문을 정보전달 매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규범신문으로 본다. 즉, 구한말의 신문은 뉴스의 전달보다는 국민제물을 위한 규범과 가치교육에 더 중점을 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신문논설 중에는 뉴스와 관계없는 것이 많았다.

끝으로 독립신문 논설이 수용되지 않는 데에 대한 반작용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더 규명해 보도록 하겠다.

陳교수님은 세가지 질문을 하셨다.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사회적 운동이 보수세력에 의한 강력한 반대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앞으로 보수세력의 의사를 대변한 여러 신문을 분석하여 독립신문의 경우와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두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신문을 주관해 온 서재필의 사상형성 과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서재필은 미국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계몽주의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주장한 사상이 계몽주의자들의 사상과 동일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두가지가

구명되어야 한다. 하나는 독립협회 구성원들의 사회계층적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서재필의 영향이 지대했으므로 서재필의 개인적 사상에 대한 분석이다. 이점도 더욱 자세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徐大庸 : 金南植 선생님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민족주의에 기반하지 않는 공산주의 운동이 성공한 예는 없었다. 코민테른만 하더라도 그것이 소련의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었던 것이고 소련의 민족주의가 자본주의와 타협하여 민족주의적 성격이 희미해지자 해체된 것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민족주의를 반대하면서 주체사상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는 민족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陳교수님의 세가지 질문에 답하겠다. 첫째, 白南雲氏의 저서를 읽을 때 그가 사회주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았다. 그는 후에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를 주장하지만 신민주주의를 주장할 당시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사고가 확고하지 않았던 때였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질문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적 요소가 과연 무엇인냐라는 질문인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토론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민족형성 시기에 관한 본인의 견해는 우리 나라 민족의 국가의식 내지는 민족의식이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에게 부여되었는가를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의세의 침입으로부터 무엇을 보존해야 하느냐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한 시기를 잡은 것으로서 그 시기가 대체적으로 麗末鮮初쯤일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는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다.

金學俊 : 陳교수님은 李承晩의 ‘一民主義’가 사실상 李承晩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독청제의 이데올로기였고, 그러한 이유때문에 李承晩이 독청제를 제거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점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개

인적으로는 안호상박사가 李承晩의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一民主義’를 들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陳교수님의 견해가 더 타당한 것 같다. 이 부분은 改考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

〈一般參席者들의 質問〉

金東成 : 劉교수님께 한가지 점을 질문하겠다. 개인적으로는 독립신문에서 강조된 민주주의 가치를 논할 때, 신문에 나타난 가치표현 보다는, 이러한 가치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정치체제의 특성과 연관되고 또 특정정치체제를 구성하는데 어떠한 기여를 했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본문에서 제시된 자유, 평등, 주권재민 등과 같은 가치들은 과거의 유교적인 전통속에서도 강조되었던 개념들이었다. 그러나 전통적 의미의 가치들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서구적 의미의 민주주의 가치와는 달리 전체주의 내지는 권위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독립신문에서 강조된 자유, 평등, 주권재민 등의 가치들은, 개인주의에 입각한 서구적 의미의 민주주의 가치와 유교적 전통속에서의 고전적 자유주의 사이의 관계 즉, 개인주의와 전체주의간의 관계에서 어느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崔寬藏 : 徐大肅 교수님께 질문하겠다. 徐교수님은 주체사상이 反蘇親中の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 하셨는데, 과거 20여년 동안의 중공의 「人民日報」를 살펴 보면,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을 찾아 볼 수 없다. 만약 주체사상이 親中을 강조한 것이었다면 중공측에서도 이를 중시했을 것으로 사려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주체사상을 고정된 가치체계가 아닌 외교정책과의 관련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는 사상으로 이해하며, 동시에 중공에서는 鄧小平에 의해 1950년대 말에 개인의 우상화가 반대되었던 바, 이러한 반개인우상화 입장이 주체사상을 승인하지 않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一般參席者들의 質問에 대한 答辯〉

劉載天 : 민주주의 가치를 주장한 독립신문의 논설중에서 때로 서로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군주제를 옹호하면서도 대의제를 주장하기도 하고,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면서도 백성의 평등과 주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순은 당시의 시대상황하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주장하는데 따르는 한계라 생각한다.

이러한 모순적 경향은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두드러진다. 독립신문의 논설은 고전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전체주의적 논리전개를 보여주면서도, 사실상 논설에서 주장한 가치들은 개인주의적 민주주의 가치인 것이다. 결국, 양자가 적절히 어우러져 논설속에 수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독립신문의 논설은 모순적 경향을 지니고 있었던 관계로 과연 당시의 주장들이 이후의 정치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는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徐大肅 : 주체사상은 처음 발표되었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주체사상이 나올 당시는 중공군이 북한에 주둔했을 때였고 김일성은 중공의 집권과정을 답습하려는 생각을 했을 때였다. 그러나 곧 주체사상은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따라서 중공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큰 감명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주체사상은 원칙적으로 북한이 소련과 중공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찾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었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김일성을 우상화시키는데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본 논문에서 反蘇親中路線을 언급한 것은 주체사상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反蘇親中路線 채택의 일환으로 주체사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第4會議

司會：全海宗

發表：江炳倫，田中善一郎

討論：辛勝夏，朴忠錫，張達重

〈發 表〉

江炳倫：민주주의가 중국의 전통문화와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금세기 초부터 많은 중국의 지식인들과 정치지도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바, 크게 두가지 입장이 대립하였다. 하나는 유교적 전통 문화를 강조하는 세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적 발전을 중시하는 세력이었다. 1919년의 '5·4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은 후자에 속하는 신진 지식계층이었다. 그들은 세계의 발전된 국가를 따라 잡기 위해서는 중국도 과학을 발전시키고 민주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전통문화로서의 유교를 근대화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고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중시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사회전체적 차원에서의 부의 증대 내지는 강력한 국가건설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한편, 제3의 세력으로서 절충주의자들은 중국을 근대화시키기 위하여 민주정치 체제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민주정치 체제는 전통적인 기초위에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수용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야기되는 여러가지 사회병폐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정신문화에 기초를 둔 유교적 윤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민주주의와 전통문화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졌다. 요컨대, 민주주의 수용과 그에 따른 전통문화와의 갈등문제에 대한 중국지식인들의 해석은 전통 문화를 고집하는 경향과 민주주의 수용을 강조하는 경향 및 양자를 절충하려는 입장 등 세가지로

대별된다고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민주주의가 당시에 어떻게 이해되었는가 라는 것이다. 본문에서 본인은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제도적 측면과 관념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적 정부는 대중에 의한 정기적인 자유선거에 의해 구성된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정치권력은 법에 입각하여 통치해야 하며 법은 정치권력의 한계를 제시해주어야 한다는 원칙도 아울러 수용되었다. 한편, 관념적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적 자아의식의 발전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었다. 자유, 평등, 인간의 개성존중 등 민주주의의 주요가치가 수용됨과 동시에 대중이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를 인식했을 때에야 비로소 민주주의의 기본가치가 의미있는 것이라 여겨졌다. 이와 함께 이상적인 세계관과 종교로부터의 해방, Humanism, 반대의견이나 행위를 인정하는 것 등도 민주정치 문화의 기본성격이라는 점도 이해되어졌던 것이다.

같은 논리로, 중국의 전통문화로서의 유교를 두 가지 측면, 즉 교육과 덕과 도덕성에 의한 통치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우선 유교에 있어서 교육은 민본주의에 입각한 것으로서 고대 현인들의 이념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한 방법이었으며, 대중이 과거의 군주적 관료지배체제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방편이었다. 그러나 유교에서는 교육보다 덕에 의한 통치가 더욱 중요시되었다. 유교적 집권자는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징적, 모범적 카리스마인 덕과 도덕성으로써 대중을 지배하였다. 따라서 이상적인 군주는 현인으로서의 도덕성을 지녀야 하였으며, 덕과 도덕성으로 완벽히 무장되었다면 군주는 통치의 정당성을 쉽게 확립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거의 무제한 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특성때문에, 유교적 통치체제는 위계적인 사회구조를 필요로 하였고, 실제로 중국의 봉건주의가 이를 뒷받침 하였다. 그러므로 덕에 의한 통치체제에서는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유교에서 말하는 평등의 개념도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고 인간객체의 동일성이 중시되는 민주주의적 평등의 의미와는 많이 달랐던 것이다. 즉, 유교에서의 평등은 위계적인 상하구조속에서 사회구성원 각자가 올바르게 자신의 위치를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유교적 특성이 민주주의의 많은 부분에서 상충된다는 점과 유교적 전통문화가 과거 2천년동안 중국을 계속적으로 지배해 왔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수용은 처음부터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수용은 실제적으로 중국적 민주주의라는 특이한 형태로 정착되었고 그나마도 오랜 기간동안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田中善一郎 : 본 논문은 일본의 전후시기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수용원인 및 수용에 따른 문제점 등을 분석한 것이다.

제 1절에서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일본인의 일반적인 이해를 언급하였다. 일본에서 민주주의적 헌법이 채택된 것은 1946년이었다. 민주헌법이 채택된 이후에, 비록 1955년 이래로 自民黨에 의한 일당지배 체제가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실제로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문의 <表-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국민 중 약 43%가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제 2절에서는, 전후시기에 일본이 민주주의를 수용하게 된 요인을 역사적 배경, 사회여건, 문화적 요인 등 세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北岡伸一 교수가 이미 설명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이하에서는 사회여건과 문화적 요인에 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겠다.

사회적으로 민주주의 수용은 평등이라는 개념과 연관된다. 일본에서는 근대이전의 시기부터 봉건주의적 귀족관제가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의미로서의 평등을 쉽게 받아들였다. 더우기 일본국민들은 개

인적 능력을 기본으로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과 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평등을 이해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민주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충분히 성숙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요인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단체적인 충성이 강조되는 단체주의(Groupism)이다. 즉, 단체가 처해 있는 상황에 구성원들은 동일한 양식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수용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심과 주변을 분리하는 사고이다. 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에서 유래된 것인 바, 일본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주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심의 발달된 문화를 당연히 수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근대이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여겨 유교를 수용하였다가 서구가 동아시아에 세력을 확장시킨 이후로는 서구를 중심으로 간주하였기에 그들은 서구의 발전된 가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서슴없이 수용하였던 것이다.

제 3 절에서는, 1955년에 성립된 自民黨政權하에서 야기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사이의 의견대립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의 대립은 사회제급구조의 갈등에 대한 견해차이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인식차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는 전후 일본사회에서 나타난 사회적 가치혼란의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민주주의 가치인식에 관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사이의 견해차이는 현재에까지도 존재하는 바, 제 4 절에서는, 이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본인이 1983년에 실시한 사회의식조사의 분석결과를 소개하였다. 민주주의의 주요가치인 자유와 평등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일본지식인들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의식은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自民黨을 지지하는 지식인들은 대체로 비민주적이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지식인들은 전자에 비하여 민주주의적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의 <그림-2>를 참조하길 바란다. 들

째,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지식인들의 사회주의 의식보다 自民黨을 지지하는 지식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가지는 의식이 더 다양하였다. 역시 본문에 제시한 自民黨의 지도계층, 지식인계층, 대학생들로 나누어 상세히 분석한 결과를 참조해 주길 바란다. 부과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그들이 생활에서 중요시하는 가치를 물어본 결과, 自民黨 지지자들은 지지와 의무를 내세운 반면 社會黨 지지자들은 평화와 자유 등을 중시하였다. 한편 共產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평화, 민주주의, 자유, 권리 등의 순서로 중요시하는 가치를 내세웠다. 이상의 내용 및 기타 여러가지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일본에서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사이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정치문화에 있어서 지역주의적 성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점에 관하여는 제5절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였다. 제5절에 인용한 도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自民黨의 지지자들은 대체로 전통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은 지역간의 질서와 조화를 중시하는 경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自民黨은 각계각층의 동등한 정치참여와 사회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신봉하기보다는 지역 세력간의 질서와 조화에 더 큰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당조직 역시 지역적 안배차원에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료적 행정조직을 매개체로 하여 지역이익을 조절하는 것을 더욱 중시하였다. 결국 이러한 自民黨의 기본입장으로 인하여 농촌과 같은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높은 정치참여가 나타났고 東京 등의 대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장기간의 自民黨에 의한 지배는 일본에서 실제적인 민주주의가 적용됨에 있어서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적 정치상황은 현재 일본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討 論〉

辛勝夏 : 본 논문은 이번회의 주제와 가장 잘 부합되는 논문이라 생각한

다. 민주주의의 수용과 전통문화 사이의 갈등과 조화라는 주제를 선명히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수용 초기에 중국 지식인들이 '民主'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더우기 중국에서 민주주의가 지니는 의미까지도 다루어졌기 때문에 논문제제나 구성상 가장 적절한 논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학적인 입장에서 볼때, 본 논문에는 개념설정과 논리전개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있다. 첫째는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수용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사회·경제사적인 배경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민주주의가 발생한 그리스의 아테네 경우나 서구의 민주주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상공업의 발달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배경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둘째, 중국에서는 1911년 신해혁명 이후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도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당시에 성립된 중화민국은 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을 만들고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등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민주적 행위까지도 발생하였다. 그런데 江교수님은 末淸까지의 시기에 있어서 서구의 민주주의 개념이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용되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하셨지만, 그 이후의 시기 즉 중화민국 성립후에 민주주의가 실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으셨다. 이를 좀더 보완해 주셨으면 한다.

셋째, 영국에서는 귀족제급에 의해 왕권이 견제됨으로써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사대부라는 황제권을 견제할 수 있었던 귀족제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황제권이 견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에서 민주주의가 수용되고 전파

됨에 있어서 사대부라는 귀족계급이 담당한 역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

朴忠錫: 먼저 江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의 전통문화와 민주주의의 양립 가능성의 문제를 원리적 차원에서 다루셨는데, 실제로 그러한 문제점이 명확히 분석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개인적으로는 양자간에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원리적 차원에서는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세가지 논리적 근거가 있다. 첫째, 유교와 민주주의는 사상체계에 있어 비중을 두는 대상이 다르다. 즉, 사상체계가 다루고 있는 부분을 인간의 내면세계와 객관적 현실세계로 나누어 본다면, 민주주의는 현실의 객관세계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유교는 인간의 내면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교가 양측면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덕치주의에 대한 강조나 계서적 사회관 중시시각 등을 고려해 볼 때, 다분히 인간의 내면세계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는 정치적 정의를 도출하기 위한 양자의 방법론적 차이를 들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토론을 통해 정치적 합의를 추구하는 반면, 유교에서는 ‘修身’이라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 정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세째, 유교에서의 사회관은 공동체의식에서 성장된 반면,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사고에서 사회관이 발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판단하건대 민주주의와 유교가 가치이념적 차원에서 상호공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원리적 차원에서는 양립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田中교수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본문에서 미국에서 발생하였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대립이 일본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시면서 그 원인을 전통문화와의 갈등에서 찾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대립을 일본 뿐만 아

나라 한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본다면 대립의 원인을 전통적인 정치문화에서 찾기보다는 경제적 평등과 같은 경제적 가치문제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張達重 : 동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 수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의문점은, “동일한 전통문화를 가진 동양삼국이 서구적 민주주의를 수용함에 있어서 상이한 대응형태를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봉건주의적 배경을 가진 국가와 관료주의적 배경을 가진 국가를 비교분석해 주신 江교수님의 논문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동일한 봉건주의 전통을 가진 국가 사이에서 상이한 민주주의 체제가 등장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같은 논리로 동일한 관료주의 전통을 가진 국가들간에 상이한 민주주의 수용형태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다. 江교수님의 논문에서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통치체제에 있어서 법과 도덕이 지니는 의미에 관한 것이다. 교수님이 논의하신 대로 서양에서는 인간적 요소를 정치적 분야에서 최소화시키는 데에 민주정치의 목표가 있었던 반면, 유교가 지배하는 전통중국에서는 덕과 도덕성이라는 인간적 측면이 통치의 기본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조공제도와 같은 지배방식하에서는 덕 내지는 도덕성 같은 요소가 중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즉, 중국이 강할 때는 조공제도가 활발하였으나 국력이 약해지면 조공제도 역시 활발히 수행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이상에 제시한 논리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田中교수님의 논문에서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질문은, “전후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고, 大正民主主義가 실패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나”는 것이다. 이러한 대조적 현상

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둘째, 일본의 파벌관계는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일본의 야당세력 내에서의 파벌투쟁은 궁극적으로 自民黨에 의한 일당독재의 장기화를 초래시켜 비민주적 결과를 야기시키는 반면, 자민당내의 파벌관계는 자민당의 민주주의적 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파벌간의 갈등이라는 하나의 현상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기도 하고 촉진시키기도 하는 양면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答 辯〉

江炳倫 : 박교수님의 지적은 유교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교수님이 제시하신 유교의 특성이나 기타 여러 유교의 속성에서도 민주주의와 부합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찾아낼 수 있다. 나 역시 민주주의와 전통유교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전통가치 속에 민주주의와 부합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점과 민주주의가 수용될 당시의 중국 지식인들의 사상적 수용노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양립할 수 없다고 단정짓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학문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더욱 심오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 사회·경제사적 배경설명이 소홀하게 다루어 졌다는 辛교수님의 지적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辛교수님의 상공업과 민주주의간의 관계에 관한 논리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는 상공업이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정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의 수용과 발전에 관계된 문제를 그러한 논리에서 분석할 것이 아니라, 개별국가의 정치문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辛교수님이 제시한 기타 문제와 張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의 유교가 지니는 세가지 전통문화적 성격을 간단히 설명함으로써 답변을 대신하겠다.

첫째, 중국인들은 황제 및 지배계층의 권위를 숭상하는 한편 그러한 권위가 사회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지배계급의 권위는 민주주의에서와 같이,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통치의 기본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둘째는 평등에 대한 사고이다. 전통적인 사고내에서 평등의 개념은 만민의 동등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평등은 위계적 사회구조내에서 각자가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위치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당시의 평등은 계서적이었으며 전통적인 유교개념 내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다. 세째는 반대파와의 경쟁을 정당화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중국의 전통적 관료주의체제는 여러개의 개별단위를 통합적으로 통치하는데 효율적이 되도록 발전되었다. 따라서 구성단위간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러나 유교에서는 갈등을 막기 위하여 조화를 강조하였다. 즉, 반대세력의 존재를 기본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와는 달리 중국의 전통적 정치체제는 구성단위의 다양성과 상이성을 하나의 거대한 구조틀내에서 조화시키고 융합시키는 것을 더욱 중시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특성들을 더욱 심도있게 연구한다면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수용과 전통문화 사이에서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부분적으로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田中善一郎 : 박교수님의 지적대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간의 대립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경제적 변수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고찰할 때 이를 보완하도록 하겠다.

또한 張교수님이 지적하신, 일본정치에 있어서의 파벌갈등문제라든가 전통문화와 민주주의의 수용사이에서 제기되는 여러문제 등에 대하여 대체로 동감한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본 논문이 일본의 민주화과정을 전통적 정치문화의 측면에서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 역

시 보완하도록 하겠다. 다만 전후 일본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원인과 大正民主主義가 실패하게 된 원인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원인은 민주주의적 제도의 정착 여부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즉, 전후의 일본에서는 미점령군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었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었던 반면, 大正期에는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이해와 수용만 있었을 뿐 그러한 사상적 수용이 특성의 제도로 정형화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第5 會議

司會：李光麟

發表：李萬甲，金泰吉

討論：崔載賢，李三悅

〈發 表〉

李萬甲：본 논문은 조선말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약 1세기에 걸친 기간을 조선조 말기, 日政期, 해방후의 세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한국인들의 의식과 한국사회구조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그러한 특성들이 서구민주주의 사상을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가를 고찰한 것이다.

우선 조선조 말기의 특성을 언급하기 전에 두가지 점을 미리 밝혀두는 바, 하나는 한국인의 기본의식에 관한 것이다. 태고 이래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던 의식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샤머니즘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신라 시대 이래로 불교가 전파되기도 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정착되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외래사상은 왕권 및 귀족세력들과 결합하였을 뿐 서민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다. 둘째는 조선사회의 신분제급에 대한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사회의 계층구조를 양반·중인·상민·

천민 이상 네 가지로 구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양반과 중인 사이에 鄉班과 土班이라는 몰락한 양반계층을 넣어야만 조선조 말기의 사회변동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庶孽계급도 기존의 지배계급에 대한 도전세력으로서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인이나 상민 또는 천민들은 기존의 사회구조 내에서 고정화되어 있던 계급이었기 때문에 서구제도를 수용하여 구체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조선조 말기에 기존질서에 대한 도전세력으로서 독립협회와 동학당을 들 수 있다. 독립협회는 忠君愛國하여 自生獨立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수단으로서 백성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비록 독립협회는 민주주의의 가치로서 자유주의나 개인주의를 소개하였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개화, 교육, 반상타파, 남녀동등권 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독립협회를 주도하고 지지한 세력들은 진보적인 양반, 특히 앞에서 언급한 향반·토반·庶孽·중인 등 기존세력에 도전하는 세력들이었다. 한편, 동학당도 독립협회와 마찬가지로 앞에 언급한 세력들에 의해 주도되어 졌으나, 독립협회와 다른 점은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다.

조선조 말기 한국사회에 미친 외세의 영향으로서로는 자본주의 경제와 기독교 사상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한국국민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본인들의 필요에 의해 수용이 강요된 것인 반면, 기독교사상은 미국에 중심을 둔 개신교의 전도사들에 의하여 도입되었던 것이다.

日政期の 한국사회 계층구조의 중요한 특징은 갑오개혁이후 신분제도가 철폐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신분계급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현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이 전체적으로 계층구조상 하강이동했다는 점이다. 한편 의식적인 측면에서 한국인들은 일제의 압제로 인하여 민족주의적 의식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을 적대시하는 서구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친서방적 사고가 높아짐과 동시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불교나 유

교 등이 전통가치가 몰락한 양반계층이나 일반서민들의 의식을 폭넓게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서구사상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日政期の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쉽게 바꾸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서구사상의 수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었지 의식의 심층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이 미쳤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한국인들이 보다 중요시했던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국민족의 자주독립이었던 것이다.

해방후 사회구조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식민지통치세력이 일시에 몰려감에 따라 지도력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사회계층의 상승이동이 활발했다는 점이다. 그외에도 남북분단 및 농민의 경제적 여건향상, 이북사람의 대량적인 남하 등도 주요변화로 간주할 수 있다. 의식면에서는 상당히 민주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연합군에 의해 독립이 이루어졌다는 점, 미군정의 영향,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인식 등을 들 수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6·25의 영향이었다. 그러나 6·25 이후의 한국정치사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한국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구현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신봉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내면적인 민주주의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여 지금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현재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따라서 차체에 민주주의를 빨리 성숙시키겠다는 성급한 자세를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金泰吉 : 본 논문은 하나의 ایده올로기를 평가할 때, ایده올로기 자체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ایده올로기를 사회나 국가에 적용시킬 경우 그 사

회나 국가가, 이데올로기가 주장하는 이상향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현실적인 적합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가설을 전제로 작성되었다. 즉,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수용문제를 평가할 때에는 민주주의와 한국의 실정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가설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에 부합될 수 있는 성원들의 심성과 한국인들의 전통적 가치의식 및 민주주의가 수용된 이후에 나타난 가치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부가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검토해 본 것이다.

민주주의가 하나의 통치제도로써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제도를 통하여, 모든 성원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옹호되어야 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이상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의 운영 및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충실한 성원들의 실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충실한 성원들은 민주주의와 부합되는 가치관 내지 심성을 가져야 하는 바, 대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심성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는 나와 남의 인격과 권익을 같은 비중으로 존중하는 공정심이다. 둘째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약속을 이행하는 信義心이다. 특히, 제반규정을 지키려는 준법정신은 중요한 기본적 심성이다. 셋째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거시적 안목과 삶의 공동광장으로서의 사회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의식이다. 이러한 세가지 심성은 합리적 정신을 고양시키는 전제가 되며, 합리적 정신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실천적 적합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의식은 가족주의적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족주의적 윤리가 한국의 전통윤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인간관계에서는 정과 사랑이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 인식되었고, 孝와 忠을 전통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도덕체제 전체에 있어서, 특정한 대인관계를 규정한 여러 규범들도 역시 중시되었다. 그런데 전통윤리에서의 인간관계란 수직적 관계를 의미하기에 개인보다는 개인이 차지

하는 사회적 지위와 개인들 상호간의 상대적 관계가 더 중요시되었다. 결국, 전통사회에 있어서 한국인의 자아의식은 개인주의적이기 보다는 가족주의적이었던 관계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공정한 정신이나 가족보다 큰 사회조직을 중시하는 공동체의식이 강조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국인의 가치의식은 19세기 중엽 신분제도가 타파됨으로써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일제침략에 직면하여 민족의식으로 새로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여 주권 국가의식으로서의 발전, 특히 민주국가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가치의식의 변화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는 하나, 민주주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생적 요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타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민주화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합리적 정신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민족의식 내지는 조국의식도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적 공동체의식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하겠다. 더우기 뿌리깊은 관존민비의 관념 및 수직적 질서를 중시하는 전통의식 등도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전통속의 비민주적 의식들은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실제적으로 많은 것이 변화되었고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의를 확고히 하는 한편, 이를 위한 의식개혁을 과감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전통적 의식구조를 민주주의에 부합되도록 개선 발전시킨다면 민주사회 건설이 그다지 먼 장래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討 論〉

崔載賢: 두분 선생님의 말씀은 학술적 차원을 훨씬 뛰어 넘어서 오랜 역

사적 경험속에서 나온 가르침이기에 후학들이 배울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

金교수님은 시민적 공동체의식을 개인주의와 합리적 정신과 연관시켜 정립해 주셨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민주화의 실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민주국가라는 애매한 표현보다는 法治國家라는 개념이 오늘날의 현실적 문제해결과 민주사회 구현이라는 목표에 더욱 잘 부합되리라 생각한다.

두분 선생님이 지적하신 여러가지 문제는 결국 민주주의의 제도적인 의형만을 갖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인간의 내면화된 가치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가치가 선행하느냐 제도가 선행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분 교수님께서서는 이러한 문제를 장기적인 시각과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극복하려 하셨는데 그러한 방법론적 시각은 새롭고도 중요한 것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Max Weber의 뗏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서구적인 의미의 가치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비서구적인 것은 비합리적으로 간주하는 사고가 논리에 게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두분 교수님의 논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문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큰 실망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다음으로 민주주의의 물질적 기초 내지는 제급적 기반과 관련하여 볼 때, 서구에서는 시민혁명의 발생과 혁명을 주도한 부르조아계급이 있음으로 하여 민주주의가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러한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역사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가치나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이 성숙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역사적 제도도 중시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점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적 시민의식의 성립이 불가능하였던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국가가 대중에게 부과한 고통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근대이전의 시기에 국가는 신분체제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고 근대

이후에는 자본을 통해 구속하고 있는 관계로 시민의식의 성립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장래에 민주사회를 구현시킬 수 있는 시민 공동체의식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국가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판단된다.

李三悅 : 두분 교수님의 논문과 관련하여 세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서구의 민주주의의 가치관과 전통가치를 상호 비교분석함에 있어 중요시해야 할 점은 제도와 가치사이의 관계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가치라는 것은 사회의 구조속에서 배태되고 배양된 것인 한편, 구조가 변함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의식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치가 나오게 된 사회구조를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가치의식은 사회구조의 반영인 바, 한국에서의 전통가치를 논함에는 필수적으로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서의 사회구조에 대한 설명이 따라야 한다.

둘째, 우리의 전통문화나 가치의식 속에서 부정적인 측면외에 긍정적인 면도 찾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주권재민과 같은 민주주의의 주요가치는 우리의 전통가치 중에서 민본사상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다고 보겠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전통가치 속에는 민주주의 수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정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긍정적 의미가 부각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능해 진다.

세째는 전통가치관 및 사회의식의 변화와 발전을 사회구조와의 관계에서 동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가치의식은 서구의 사회구조 변화과정과는 다른 변화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기에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가치와는 상이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수용에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비민주적 사회가치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가치와의 성격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의 시기와 정도 문제에

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좀더 설명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答 辯〉

李萬甲 : 두 토론자가 제시한 질문들은 근본적이면서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평소에 지니고 있던 느낌을 말씀드림으로써 답변을 대신하겠다.

민주주의는 여러가지 양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면, 그때의 민주주의는 治者에 의하여 被治者의 의견이 존중되는 정치체제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는 과거에서부터 治者에 의해 被治者의 의견이 존중되는 정치체제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생각보다는 한국의 전통적 정치체제가 민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로는 앞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가족중심적 사고와 신분지향적 경향만이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문제가 되는 요소이다. 전통적인 의식속에서의 신분제급적 사고는 治者와 被治者의 관계를 극단적인 대립관계화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장래에 좀더 나은 민주사회를 구현하려면 治者와 被治者간의 상호이해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함은 물론, 부정적인 의식에 대한 개혁이 따라야 할 것이다.

金泰吉 : 민주주의를 논의할 때, 서구적 의미의 민주주의만을 한정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아시아에 수용되고 전파된 것이 서구식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그것을 논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서구적 민주주의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한국이 반세기동안 서구민주주의를 받아

들여왔기 때문에 이 체험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동시에, 이를 토대로 보다 바람직한 민주사회를 건설해야 할 것이라는 개인적 판단이 있었던 관제로 서구식 민주주의에 입각한 논의를 전개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두 교수님은 공통적으로 제도와 가치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가치와 제도는 상호 단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도는 형식적인 면만이 아니라 가치관이 투영된 잠재적인 제도까지도 포함된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제도를 폭넓게 이해하고 가치와의 상호 관련성을 중시한다면 가치와 제도사이의 갈등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 사려된다.